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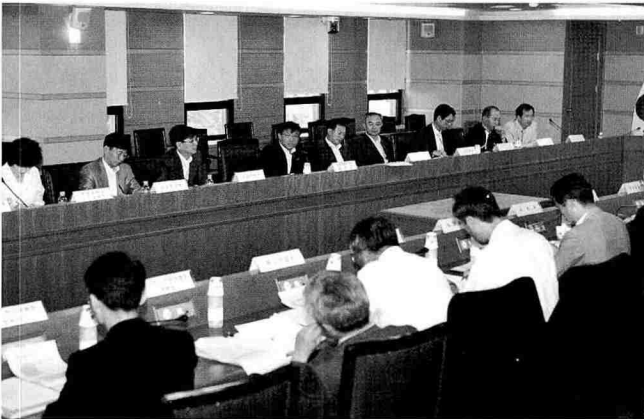


범국가적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대책 마련

제1회 산업기술 보호 실무위원회 개최

'07.7.18(수), 10:00 ~ 11:30 과천청사 산자부 회의실에서 오영호산자부차관(산업기술보호실무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제1회 산업기술보호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안), 산업기술보호지침(안), 국가핵심기술 지정(안) 등 주요 안건들에 대해 협의를 하였다.

산업기술보호실무위원회는 금년 4.28일 발효된「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에 의해 출범한 것으로서, 정부부처의 정부위원 22명(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1급)과 민간 위촉위원 8명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오영호 실무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김형준 서울대 교수, 김정희 영남대 교수 등 민간위원 8명에게 실무위원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 민간 위촉위원(8명, 가나다순):경중민 KAIST 교수, 김문겸 연세대 교수, 김정희 영남대 교수, 김형준 서울대 교수, 문길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원장, 손기선 순천대 교수, 이동훈 고려대 교수, 이성옥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원장

금일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산자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과 관련, 국가핵심기술은 기업의 정상적인 글로벌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

안건	주요 내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안)	- 향후 5년간('08~'12)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추진방향, 중점추진과제, 기타 재원확보방안 등 제시
산업기술 보호지침(안)	-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대상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정한 산업기술 보안 매뉴얼
국가핵심기술 지정(안)	-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과 전기전자, 자동차, 정보통신 등 8개분야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토대로 잠정적으로 44개의 지정대상기술 선정 ※ 44개 : 전기전자 4개 · 자동차 8개 · 철강 6개 · 조선 11개 · 원자력 4개 · 정보통신 6개 · 우주 5개
기타(4건)	- 법에 정한 각 위원회의 운영규정(안) 검토 ※ 법에 정한 각 위원회 :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업기술보호실무위원회,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산업보안정책협의회

서 필요 최소한으로 지정할 계획임을 밝히고, 이번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된 총 44개의 국가핵심기술은 8월 중순경 개최 예정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국가핵심기술 선정과정에서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건교부 등 관련부처별로 용역 및 설문조사, 업계 · 연구계 · 학계 등과 수차례 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① 국가안보 ·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② 관련 제품의 국내의 시장점유율, ③ 해당 분야 연구동향 ·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실무위원회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동 제도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동 제도에 대한 對국민 교육과 홍보 전략을 마련키로 하였으며, 특히 동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對기업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